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과제

전 병 곤

통일연구원·연구위원

10월 13일 하루 일정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번 양국 정상의 회동은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과 2005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에 이은 세 번째였다. 이로써 중·일 정상회담(10.8)과 한·일 정상회담(10.9)에 이어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의 양자 정상회담이 완료되었다.

원래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7.5) 이후 경색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타개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9.15) 이전에 예정된 회담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실험(10.9)으로 인해 한중 양국은 단독, 확대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북핵 실험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 핵 실험 사태를 포함한 지역문제에 관한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동북공정을 비롯한 양국 간의 현안문제에 관한 합의이다. 먼저 양국관계에 관한 합의내용을 보면, 최근 양국 간에 논란이 되었던 동북공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후진타오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합의(2004.8)한 5개 구두양해사항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또한 2003년 양국이 합의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12년까지 양국 교역을 2,0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한·중수교 15주년이 되는 2010년에 ‘한·중 교류의 해’를 갖기로 합의했다.

두 번째로 북한 핵실험에 관한 양국의 합의내용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브리핑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 양국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공동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그동안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양국의 역할을 상호 평가하고, 향후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외교적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 한중 양국이 합의한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로 요약된다. 북한의 핵 실험은 ‘당근’을 위주로 한 한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채찍’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채찍’은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수준의 ‘채찍’은 아니다. 즉, 징벌이 아닌 효과적인 수준의 대북제재 수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효과적인 수준’이란 북한의 모험주의(추가 미사일 또는 핵실험)를 자극하지 않고 북한을 대화의 틀(6자회담)로 복귀시킬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기 붕괴나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우리의 국익에 위배된다는 점,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만족스러운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북제재의 수위를 놓고 진행될 미·일과 중·러의 경쟁구도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균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간 협력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이 향후 적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이밖에 북한 핵 실험문제의 긴박성으로 인해 크게 주목되지는 않았지만, 동북공정을 통해 나타난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한중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도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